



2024.01.29.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85호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와 시사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85호

ISSN 2733-8258

발행일 2024년 01월 29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 5층 국회미래연구원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와 시사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CONTENTS

1. 서론	05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 대상 설문 개요	07
3. 설문 응답 결과	10
4. 결론 및 시사점	23

* 본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중점연구 과제인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략 연구' 과제의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됨.

• 지난 연구에서 전문가 FGI를 통해 도출된 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이슈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갈등 관리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설문 대상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보급-송배전-활용 단계의 갈등 이슈에 관계되어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이며,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은 활용 단계의 갈등 이슈의 이해관계자임.
-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등 재생에너지 관련 10개 내외 협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협조를 통해 해당 협단체 소속의 325개 기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설문은 온라인으로 진행함.
- 해당 기업들에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에 대한 인식과 경험 여부, 갈등 완화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함.

•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기업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 설문참여 기업의 72.0%(발전사업자는 84.3%, 수요기업은 60.0%)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용 단계에서도 이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함.
-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에 대해 83.4%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저해가 되는 심각한 갈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꼽음.

• 그러나 기존 정부의 주민 수용성 강화정책에 대해 기업들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아 실효성 있는 갈등 대응 및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기존 정책 중 효과성이 있다고 응답한 정책은 대부분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임을 고려하여, 향후 갈등 관리 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방안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설문참여 기업의 97.2%가 재생에너지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리 및 해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갈등 이슈별 갈등 완화 정책 수요 및 갈등 관리 방안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정책 거버넌스 개선, 전력요금 정상화, 적기 송배전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력 정책 전반의 체계성 개선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대응 및 제도적 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 및 중재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1. 서론

○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정책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연구를 통해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갈등 이슈를 도출하고 주요 갈등 이슈에 대해 갈등의 원인, 이해관계자 등 세부 분석을 진행함(정훈, 2023)¹⁾

- 지난 연구에서는 전문가 FGI를 통해 보급(발전)-송배전(계통연계)-활용(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갈등 이슈와 전 단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갈등 이슈 등 9가지 갈등 이슈를 [그림 1]과 같이 도출함.

<그림 1> 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이슈



1) 정훈(2023.9.11),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78호

- 앞서 도출된 갈등 이슈별 이해관계자를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도출된 9가지 갈등 이슈 중 6가지 갈등 이슈의 주요 당사자²⁾로, 가장 많은 갈등 이슈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있는 주요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음.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보급 단계의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인허가 제도 문제 관련 갈등, 송배전 단계의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 활용 단계의 RE100 수요 증가로 인한 갈등과 비용증가로 인한 갈등, 그리고 전 단계 공통 적용되는 발전원별 갈등의 주요 당사자에 해당함.
 - 그러나 그간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관련된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은 많이 진행되었으나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은 진행된 사례가 많지 않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체이자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경험 여부 및 인식 정도, 갈등 완화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고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을 설문 대상에 함께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갈등에 대한 인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비교해보고자 함.

2) 갈등 관련 이해관계자는 갈등에서의 주된 행위와 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그중 주요 당사자는 갈등에서의 주된 행위자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의미함.(이선우 외., 2021)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 대상 설문 개요

1) 설문 조사 방안 및 설문 내용

○ 설문 대상 및 방법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협단체 협조를 통해, 협단체 소속 관련 기업들에 설문 참여 요청을 하였음.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재생에너지 관련 10개 내외의 협단체 소속 발전사업자들에게 설문참여 요청을 함.
-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의 경우, 글로벌 RE100에 가입한 34개 기업 중 설문 요청 당시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된 28개 기업에 설문참여를 요청함.
- 설문은 온라인³⁾으로 진행하였으며,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설문을 진행함.

○ 설문 내용

- 응답 기업의 유형과 분류, 매출액, 업력 등과 같은 기업 정보와 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이슈에 대한 인식과 경험 여부, 발전사업자와 직접 연계된 갈등 이슈의 갈등 완화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 등에 대해 질문함(<표 1> 참고).

<표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 대상 설문 내용

구분	질문 항목
응답 기업 정보	-기업 유형, 분류, 직원 수, 기업 연간 매출액, 기업 업력, 기업 소재 지역, 응답자 정보
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이슈에 대한 인식과 경험	-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의 심각성 인식 -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저해가 되는 심각한 갈등 이슈 -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경험 여부 및 경험한 갈등 유형 - 갈등 해결을 위해 시도한 방법 - 지역주민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주민수용성 강화 정책의 효과성 인식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주요 당사자인 갈등 이슈별 정책 수요	- 주민수용성(사업추진 과정 중 지역주민과의 갈등)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인허가 제도 문제로 인한 발전사업자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RE100 수요 증가로 인한 갈등 예방을 위한 필요 정책

3) 온라인 설문 시행과 데이터 취합은 리서치 업체인 마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진행함.

구분	질문 항목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관리 방안 필요성	- 재생에너지 정책추진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 -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의 완화, 해결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주체 -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의 바람직한 관리 방법 -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관리 및 중재 전문기구 설립의 필요성

2) 설문 응답자 특성

○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 및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총 325개 기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외 설비제조업/설치시공사 등도 참여함.

- 기업 유형별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40개,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은 15개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그 외 170개 기업은 설비제조업, 전력유통 및 판매업, 설치시공사 등에 해당함⁴⁾.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협단체 안내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여 응답률을 산출할 수 없으나,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의 경우 설문 요청을 한 28개 기업 중 15개 기업이 응답하여 53.6%의 응답률을 보임.
- 기업 업종/분야로는 태양광 분야가 205개 기업, 63.1%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풍력 분야는 8.0%, 그 외 분야 기업은 28.9%의 비중으로 참여함.
- 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199개 기업, 61.2%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중견기업 13.2%, 대기업 10.5%, 기타 15.1%의 비중으로 참여함. 직원 수 기준으로는 1~50명이 212개 기업, 65.2%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는 150억원 이하가 211개, 64.9%로 가장 많이 참여함.
- 기업 업력으로는 5년 이상이 58.4%로 과반수 이상 참여하였으며, 3~5년이 24.9%, 3년 미만이 16.7% 참여함. 기업 소재 지역으로는 서울·경기·수도권 지역이 40.9% 참여하였으며, 그 외 5개 도에 소재한 기업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함. 응답자 직급으로는 과장이 35.1%로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차·부장이 19.4%, 임원급 이상이 38.5% 참여함.

<표 2> 설문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수(개)	비율(%)	
기업 유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40	43.1
	재생에너지 수요기업	15	4.6
	그 외	170	52.4
기업 업종/분야	태양광	205	63.1
	풍력	26	8.0
	그 외	94	28.9

4)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 요청을 통해 설문을 진행함에 따라 발전사업자 외 유형의 기업들도 참여하였으며,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외 유형들은 그 외 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함.

	구분	응답수(개)	비율(%)
기업 규모	중소기업	199	61.2
	중견기업	43	13.2
	대기업	34	10.5
	기타	49	15.1
직원 수	1-50명	212	65.2
	51-200명 미만	48	14.8
	201-500명	43	13.2
	500명 이상	22	6.8
기업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하	211	64.9
	150억원-500억원	65	20.0
	500억원-1,000억원	27	8.3
	1,000억원 이상	22	6.8
기업 업력	1년 이하	8	2.5
	1년-3년	46	14.2
	3년-5년	81	24.9
	5년-10년	122	37.5
	10년 이상	68	20.9
기업 소재 지역	서울	39	12.0
	경기도·수도권	94	28.9
	충청도	49	15.1
	전라도	73	22.5
	강원도	16	4.9
	경상도	48	14.8
	제주도	6	1.8
응답자 정보	과장	114	35.1
	차장	40	12.3
	부장	23	7.1
	임원/부사장	35	10.8
	사장	90	27.7
	기타	23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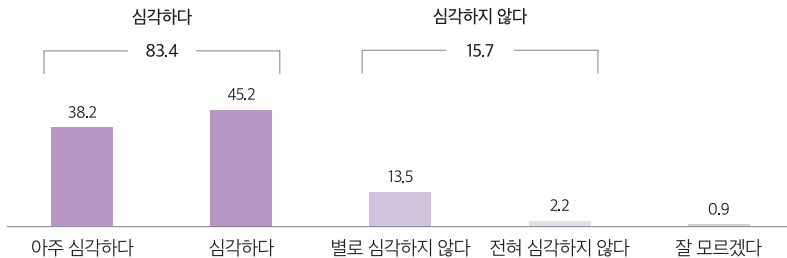
3. 설문 응답 결과

1) 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이슈에 대한 인식과 경험

-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설문참여 기업의 83.4%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15.7%에 지나지 않아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재생에너지 갈등을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함.

<그림 2>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Q1. 귀하께서는 주민 수용성 문제, 계통 접속 지연, 출력제한, 인허가 제도 문제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n=325), 단위: %)

- 전문가 FGI를 통해 도출한 단계별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 중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저해가 되는 심각한 갈등 이슈로 기업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인허가 제도 문제로 인한 발전사업자와의 갈등’을 많이 선택함.

- 1~3순위까지 가장 많이 선택한 갈등 이슈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며, 그다음으로는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으로 나타나 기업들은 1순위는 아니지만 전력계통 관련 갈등도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심각한 갈등 이슈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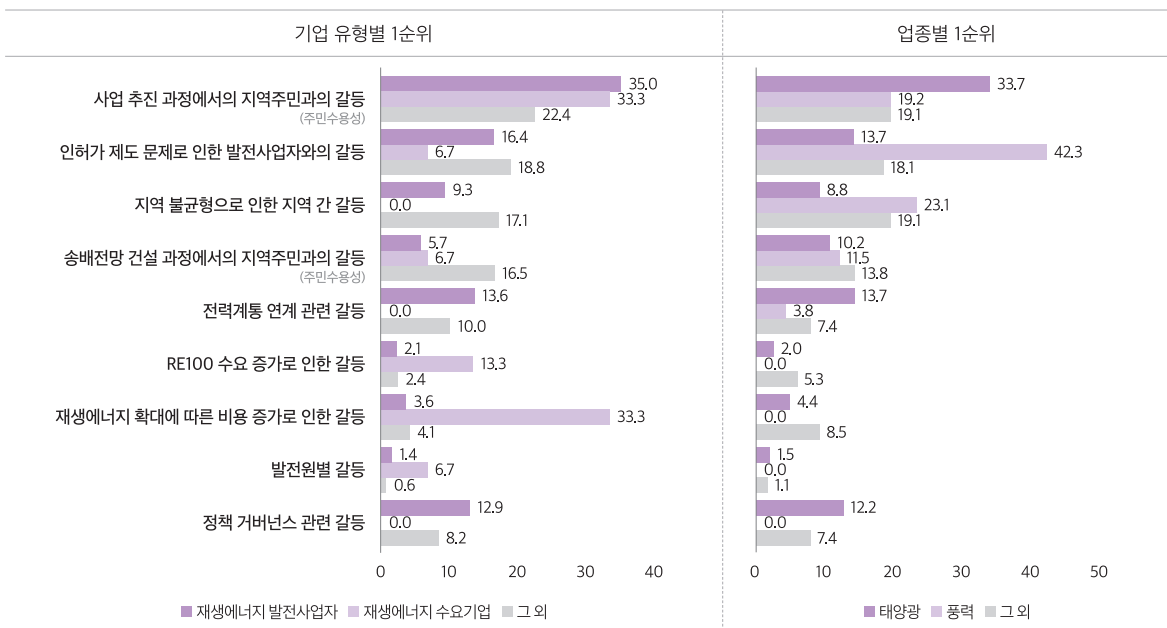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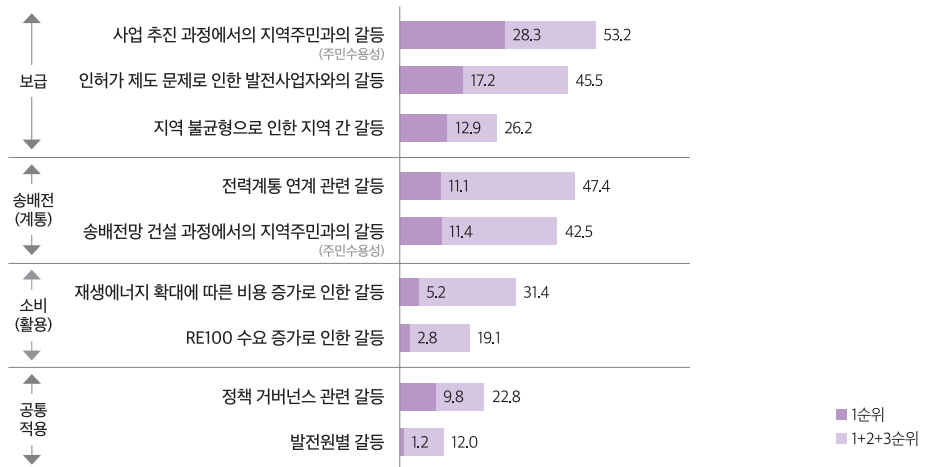
- 기업 유형별 1순위 응답 결과를 비교해보면, 발전사업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그다음으로 ‘인허가 제도 문제로 인한 발전사업자와의 갈등’을 많이 선택하여 발전 사업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갈등 이슈를 많이 선택함을 확인. 반면, 수요기업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을 공동 1순위로 많이 선택하였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비용 증가가 수요기업의 부담으로 연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생각됨.

- 업종별 1순위 응답 결과를 비교해보면, 태양광 기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풍력 기업은 '인허가 제도 문제로 인한 발전사업자와의 갈등'을 가장 많이 선택함. 태양광은 그간 보급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한 업종으로 볼 수 있으며, 풍력의 경우 인허가 제도 문제로 사업추진에 영향을 받고 있어 업종별 현황에 따라 응답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저해가 되는 심각한 갈등 이슈 순위

Q2. 다음은 재생에너지 보급(발전)-송배전(계통 연계)-활용(소비) 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 이슈 목록입니다. 이 중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저해가 되는 심각한 갈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1~3순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전체 응답자(n=32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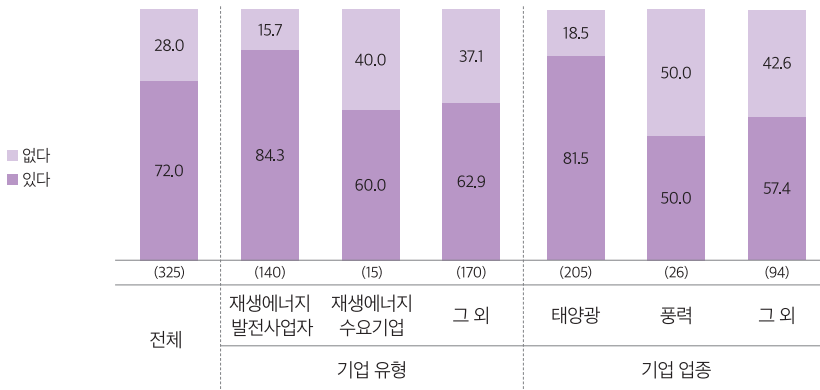
○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경험 여부에 대해 설문 참여기업의 72.0%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발전사업자 84.3%, 수요기업 60.0%, 그 외 기업 62.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이 이미 만연화되고 있음을 확인함.

- 업종별로는 보급이 가장 많이 진행된 태양광 분야가 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보급량이 적은 풍력 분야는 50.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향후 풍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풍력 관련 갈등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경험 여부와 기업 유형별/업종별 비교

Q3. 귀사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에서 제시된 갈등을 한 가지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체 응답자(n=325), 단위: %)



○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을 경험한 기업의 62.0%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 이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47.0%)과 ‘인허가 문제로 인한 발전사업자와의 갈등’(40.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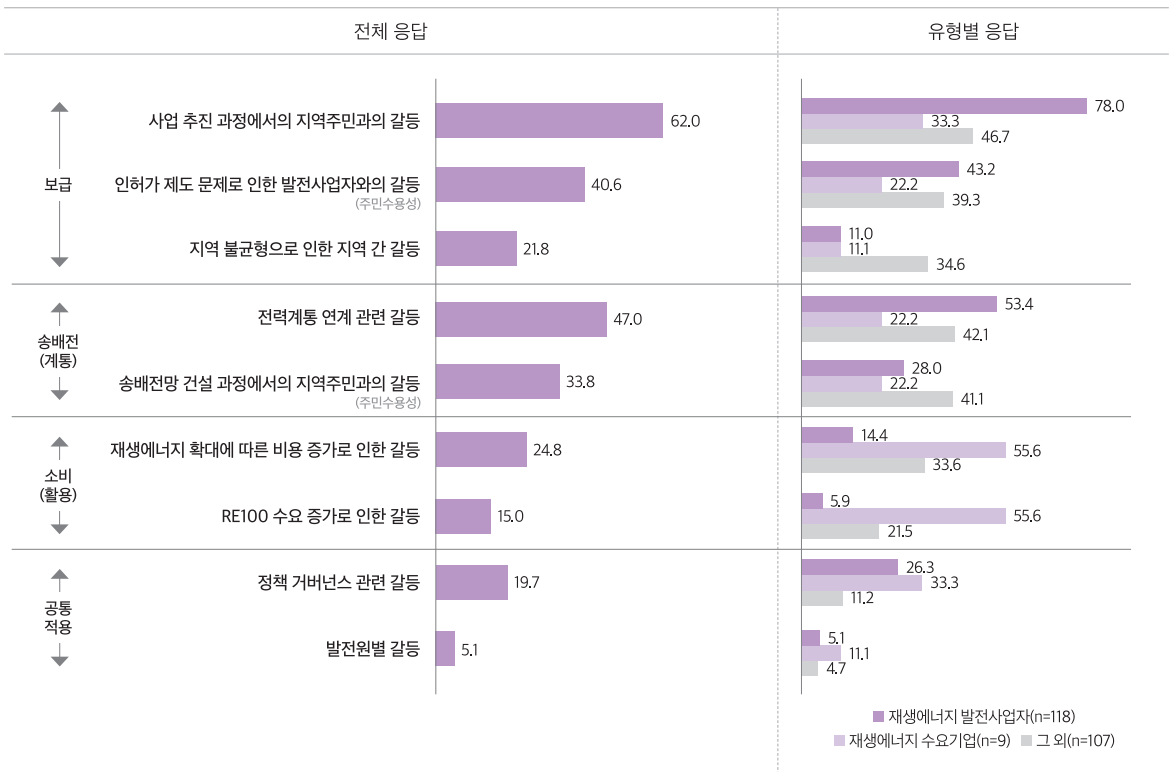
- 향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도 24.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RE100 수요 증가로 인한 갈등’도 설문참여 기업의 15.0%인 35개 기업이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 이러한 갈등도 이미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함. ‘발전원별 갈등’은 5.1%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으나, 개별 기업 입장에서 사업추진 과정 중 다른 발전원과의 갈등을 직접 경험한 사례가 많지 않아 응답 수가 적은 것으로 추정됨.

-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78.0%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53.4%는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수요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과 ‘RE100 수요 증가로 인한 갈등’을 각 55.6%씩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경험한 갈등의 유형

Q4. 귀사에서 갈등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유형의 갈등을 경험하셨는지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전체 응답자(n=23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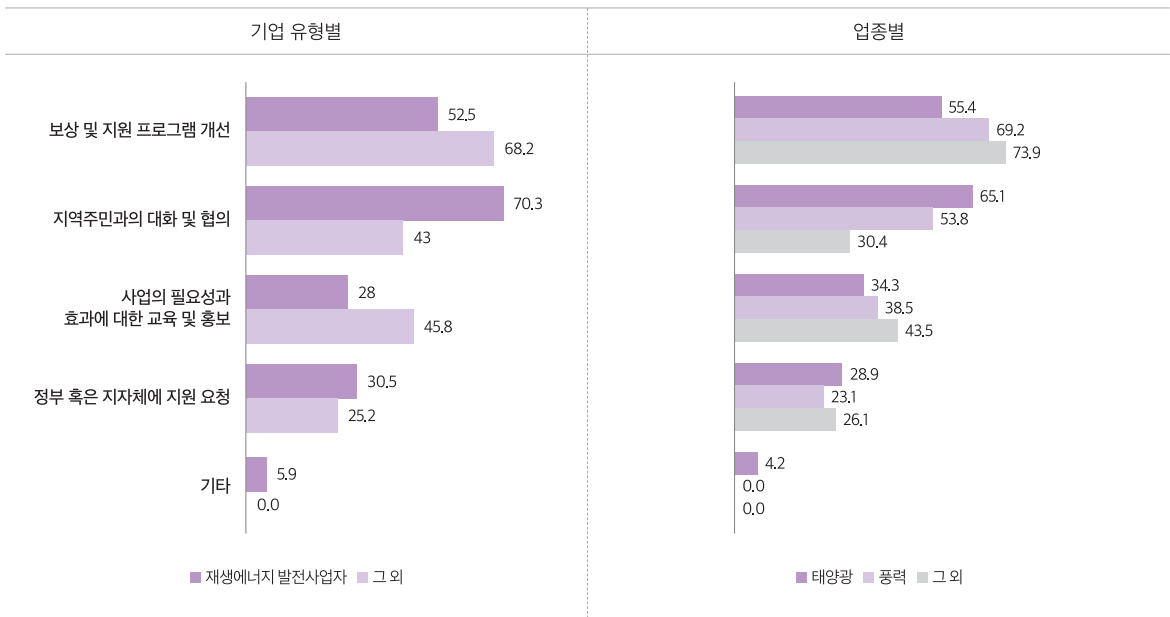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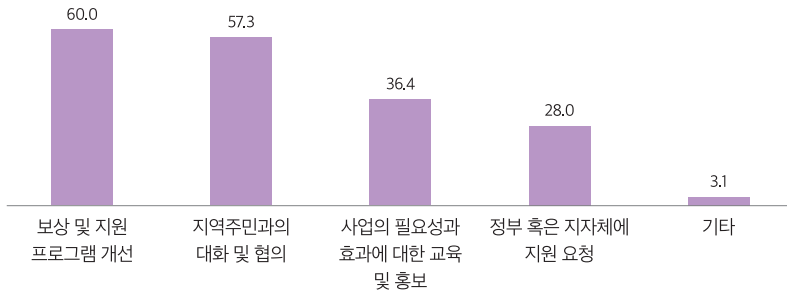


- 수요기업 외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을 경험한 기업이 갈등 해결을 위해 시도한 방법은 ‘보상 및 지원 프로그램 개선’이 60.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협의’,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순으로 나타남.
 - ‘정부 혹은 지자체에 지원 요청’을 한 기업은 28.0%로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며, 이를 통해 그간 기업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유형별로 살펴보면, 발전사업자는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협의’를 가장 많이 시도하였으나 그 외 기업들은 ‘보상 및 지원 프로그램 개선’ 노력을 가장 많이 시도함.
 - 업종별로는 태양광 분야 기업들은 발전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협의’를 가장 많이 시도한 반면, 풍력 분야 기업들은 ‘보상 및 지원 프로그램 개선’ 노력을 가장 많이 시도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 유형별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과 정도가 다르므로 선택한 갈등 해결 방식에 차이가 있는 하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와의 대화 및 협의와 함께 교육 및 홍보, 그리고 보상 및 지원 방안 마련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그림 6> 갈등 경험 기업들이 갈등 해결을 위해 시도한 방법 유형

Q5. 귀사에서 경험하신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시도했는지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업 제외 갈등 경험기업(n=22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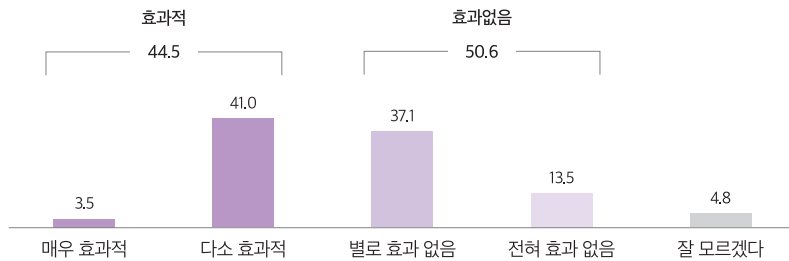


-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주민과의 갈등의 완화 수단으로 볼 수 있는 정부 주민 수용성 강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수요기업 외 나머지 기업의 44.5%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나, 50.6%는 효과가 없다고 응답함.
- 이를 통해 실제 사업 주체인 기업들은 기존 정부의 주민 수용성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 대비 상대적으로 많음을 확인함. 이에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림 7> 기존 주민 수용성 제고 정책의 효과성 인식

Q6. 현재 정부에서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발전사업 허가 전 사전고지 제도 운영, 주민참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및 REC 가중치 우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현 정책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요기업 제외 응답자(n=31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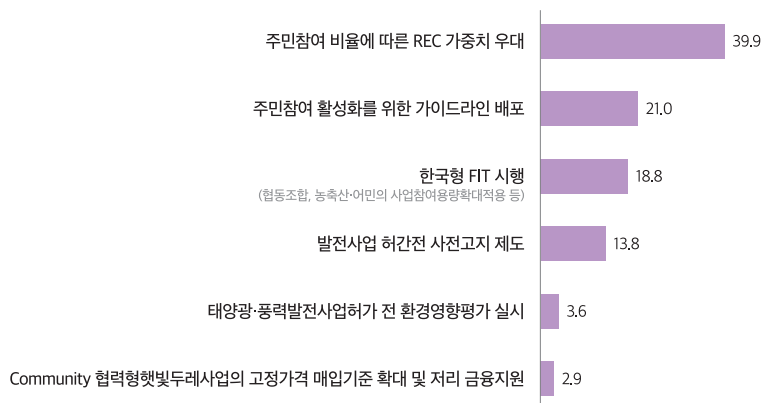


- 앞의 질문에서 기존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138개 기업들이 주민 수용성 강화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은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 가중치 우대’(39.9%)로 나타남.
- 그다음으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21.0%), ‘한국형 FIT 시행’(18.8%)으로, 기업들은 주로 재생 에너지 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정책들이 효과성이 있다고 인식함을 확인함.

<그림 8> 기존 주민 수용성 제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인식

Q7. 이전 질문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면, 어느 제도가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 수용성 강화 정책에 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자(n=138), 단위: %)



2)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주요 당사자인 갈등 이슈별 갈등 완화 정책 수요

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 관련 정책 수요

○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대해 수요기업을 제외한 관련 기업들은 해당 갈등 완화 및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 및 체계적인 정책 수립·추진'(71.6%)을 가장 많이 선택함.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추진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함.

- 그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 인허가 기준 개선(이격거리 규제 등)'(54.5%),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 이익공유 거버넌스 수립 및 보상체계 정비'(52.9%) 순으로 선택함. 다만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별도의 개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가장 적은 28.7% 기업이 선택하였으나, 이는 해당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보다는 갈등 완화 방안으로써의 기능이 부족함을 나타낸 결과로 생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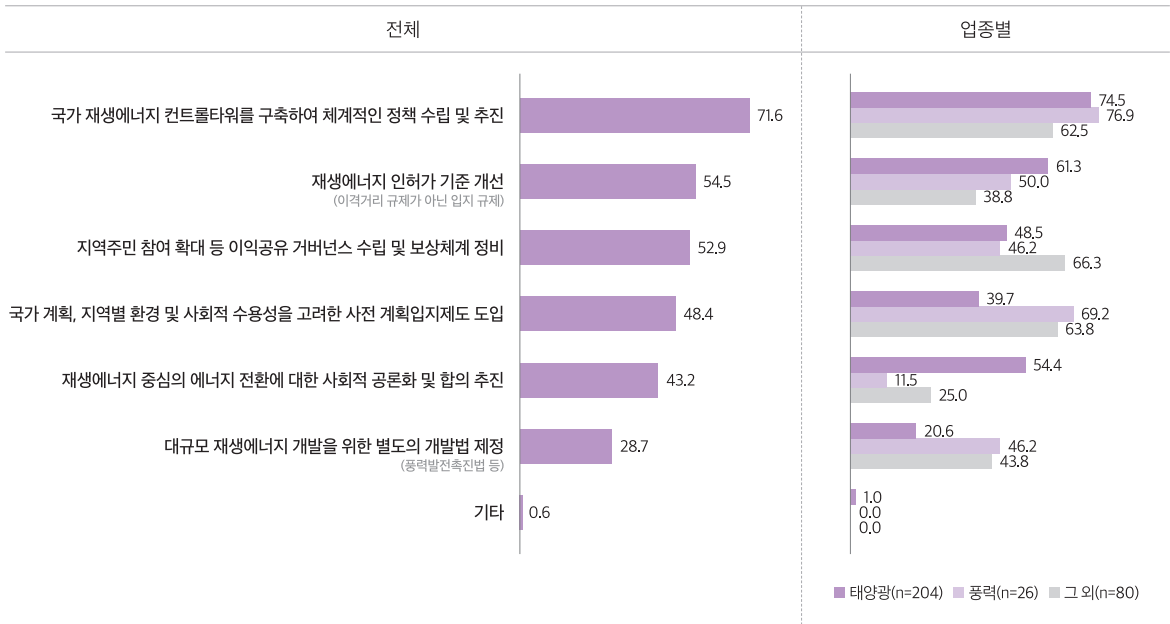
- 업종별로는 태양광, 풍력 분야 기업들은 '국가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 및 체계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그 외 분야 기업들은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 이익공유 거버넌스 수립 및 보상체계 정비'를 가장 많이 선택함. 태양광 및 풍력 분야는 신규 재생에너지원으로 정책의 체계성 제고를 통해 추가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임. 반면, 전통적 재생에너지원인 바이오, 폐기물 등의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은 정책의 체계성도 중요하나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 및 보상체계 방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판단됨.

- 태양광 분야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인허가 기준 개선'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 추진'을 그다음 순위로 많이 선택하여, 그간 보급 과정에서 경험한 이격거리 관련 갈등과 정부의 정책 방향 변화 등으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됨. 반면, 풍력 분야 기업들은 사전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하여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풍력 분야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그림 9> 사업추진 과정 중 지역주민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

Q8. 귀하께서는 앞서 갈등 이슈로 제시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주민 수용성)'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수요기업 제외 응답자(n=310), 단위:%)



② 인허가 제도 문제로 인한 발전사업자 관련 갈등 관련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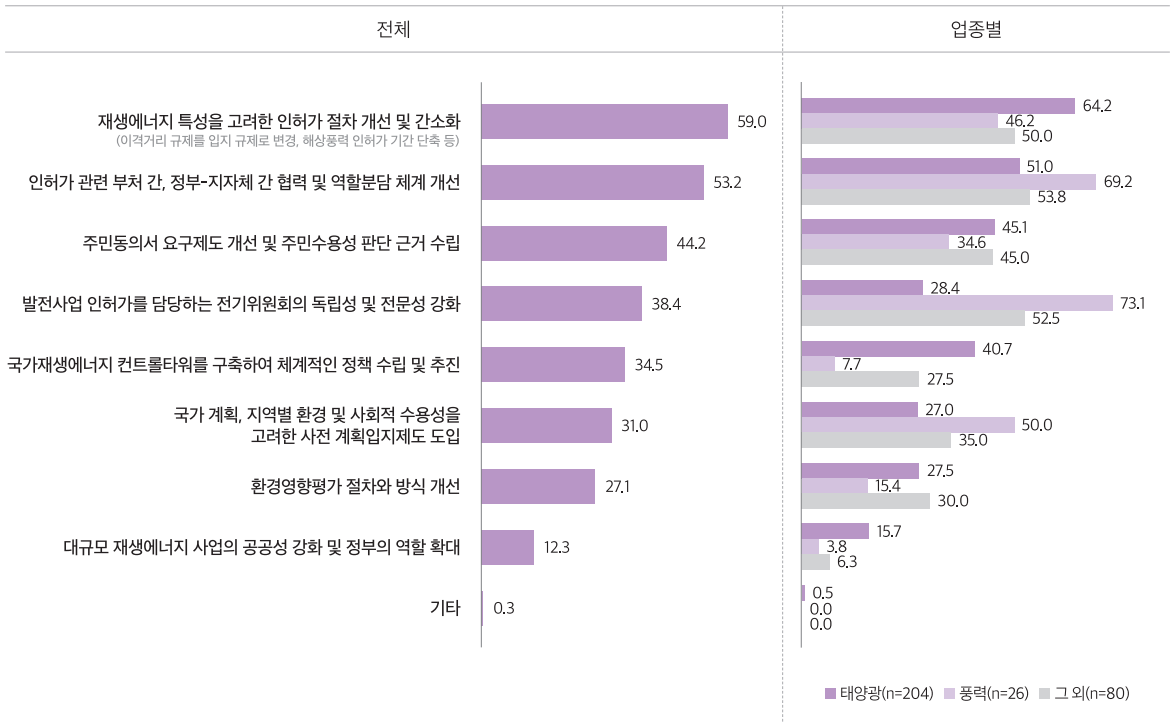
○ 발전사업자가 주요 당사자인 인허가 제도 관련 갈등과 관련하여, 갈등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수요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특성을 고려한 인허가 절차 개선 및 간소화'(59.0%)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인허가 관련 부처 간, 정부-지자체 간 협력 및 역할 분담 체계 개선'(53.2%)을 선택함. 이를 통해 기업들은 인허가 절차상 복잡성 개선과 관련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 체계 개선 등을 필요로 함을 확인함.

- 인허가 제도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어 응답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함. 태양광 기업들은 인허가 절차 개선 및 간소화와 부처·지자체 등 협력/역할분담 체계 개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풍력분야 기업들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와 '인허가 관련 부처간, 정부-지자체 간 협력 및 역할분담 체계 개선'을 가장 많이 선택함. 태양광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온 반면, 풍력은 대부분 대규모 단지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전기위원회 인허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림 10> 인허가 제도 문제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

Q9. 귀하께서는 앞서 갈등 이슈로 제시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역주민과의 갈등(주민 수용성)'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수요기업 제외 응답자(n=310), 단위: %)



③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에 대한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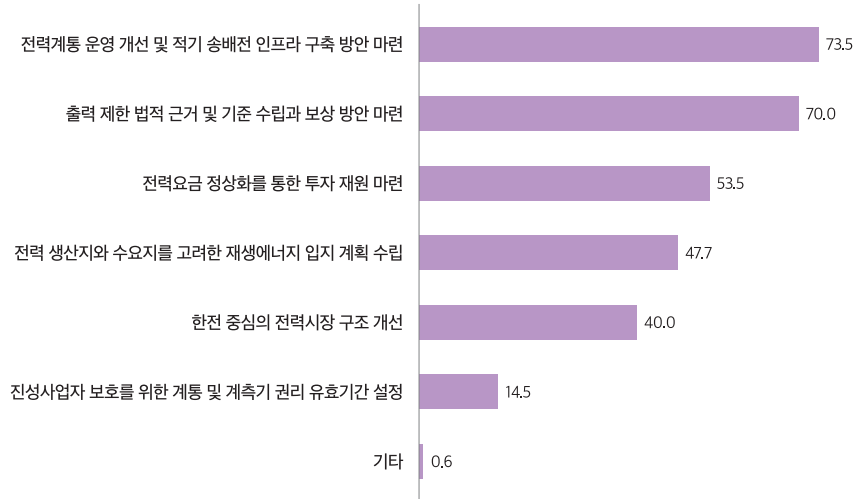
○ 수요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력계통 운영 개선 및 적기 송배전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73.5%)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출력제한 법적 근거 및 기준 수립과 보상방안 마련'(70.0%)과 '전력요금 정상화를 통한 투자 자원 마련'(53.5%)을 선택함.

- 이 결과를 통해 본 갈등의 주요 당사자인 발전사업자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이 계통 운영 방식과 송배전 인프라가 적기 구축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출력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 없이 시행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그림 11>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

Q10. 귀하께서는 앞서 갈등 이슈로 제시된 ‘전력계통 연계 관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수요기업 제외 응답자(n=31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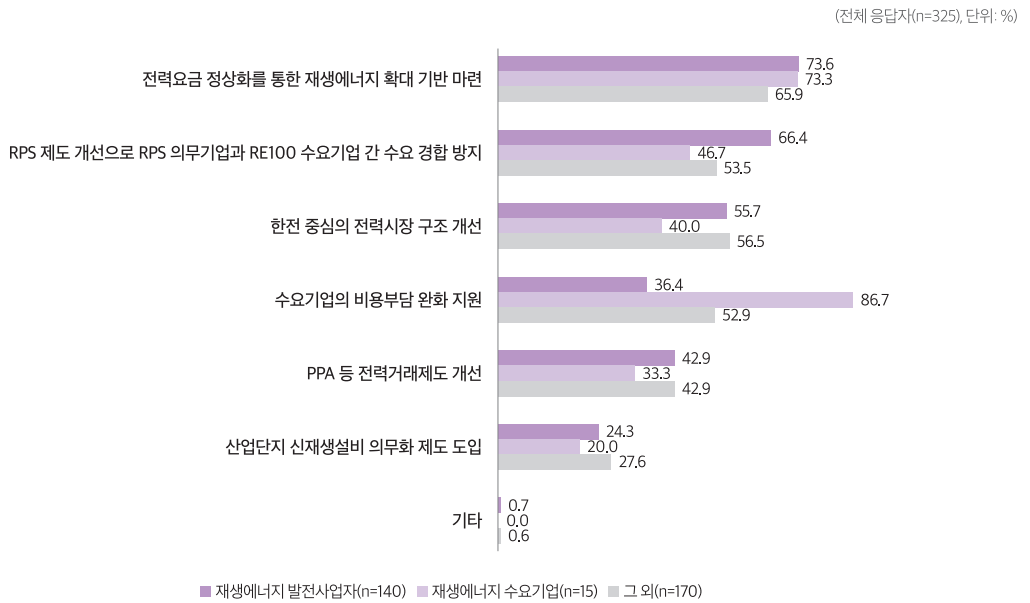


④ RE100 수요 증가로 인한 갈등 관련 정책 수요

- 본 갈등은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이 주요 당사자에 해당하며 갈등 예방을 위한 필요 정책에 대해 주요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발전사업자는 갈등 예방을 위해 ‘전력요금 정상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73.6%) 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수요기업은 ‘수요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지원’(86.7%)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다만, 수요기업도 ‘전력요금 정상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도 73.3%가 선택하여 전력요금 정상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구분 없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을 확인함.
 - 발전사업자의 경우 ‘RPS 제도 개선으로 RPS 의무기업과 RE100 수요기업 간 수요 경합 방지’를 66.4%가 선택하여 RPS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2> RE100 수요 증가로 인한 갈등 예방을 위한 정책 수요

Q11. 앞서 제시된 갈등 이슈 중 'RE100 수요 증가로 인한 갈등'은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입니다. 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3)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관리 방안 필요성

- 재생에너지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관리 및 해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 필요성에 대해 설문 참여기업들의 97.2%가 동의함.

<그림 13>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

Q12. 귀하께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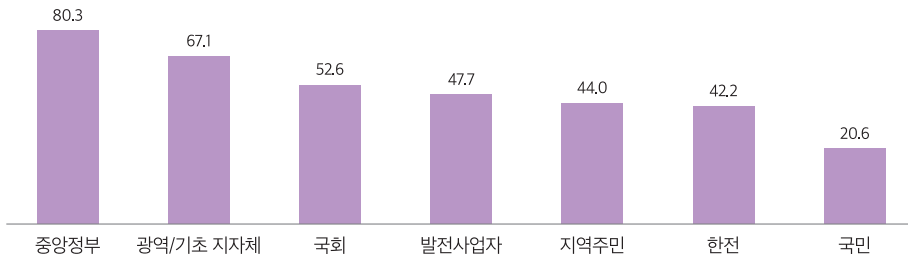


- 재생에너지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완화 및 해결 노력 주체에 대해 설문참여 기업의 80.3%가 중앙정부를 선택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지자체(67.1%)와 국회(52.6%)를 선택함.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갈등 완화 및 해결을 위해 정책 수립 및 추진 주체들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그림 14>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완화 및 해결 노력이 필요한 주체

Q13. 귀하께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전체 응답자(n=32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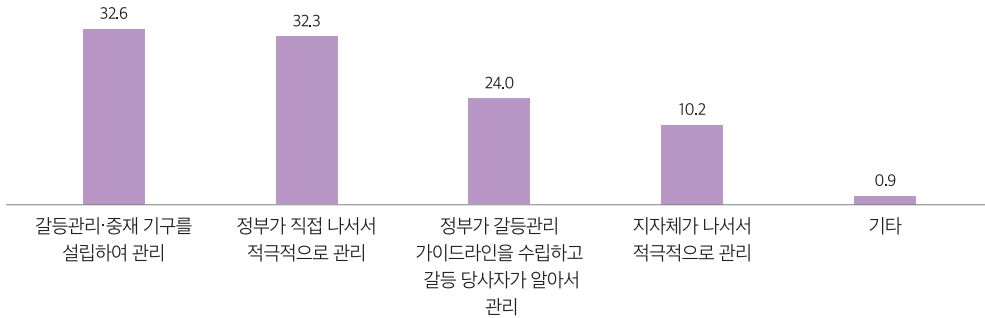


-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설문참여 기업의 32.6%가 ‘갈등 관리·중재 기구를 설립하여 관리’를 선택하고, 32.3%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선택함. 이를 통해 기업들은 갈등의 주요 당사자 차원의 노력보다는 전문적 기구 설립 혹은 정책 수립 주체인 정부의 주도적 관리를 필요로 함을 확인함.

<그림 15>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의 바람직한 관리 방법

Q14. 귀하께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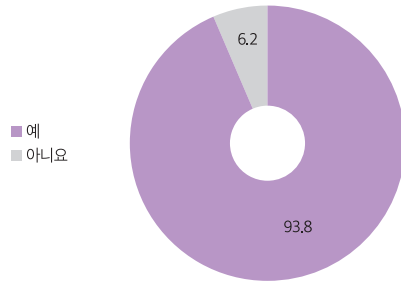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n=325), 단위: %)



-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관리 및 중재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93.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6>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 및 중재 전문기구의 설립 필요성

Q15. 귀하께서는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리와 중재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결론 및 시사점

- **재생에너지 정책의 주요 이행 주체인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미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함.**
 - 설문참여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에 대해 83.4%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저해가 되는 심각한 갈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설문참여 기업의 72.0%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 발전사업자는 84.3%가 경험한 적이 있어 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미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 재생에너지 수요기업들도 60.0%가 RE100과 비용 증가로 인한 갈등을 이미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RE100 이행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단계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간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아,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갈등 대응 및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함.**
 - 한국형 FIT, 발전사업 허가 전 사전고지 제도, REC 가중치 우대 등의 주민 수용성 강화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4.5%,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50.6%로 나타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정부의 기존 주민 수용성 강화정책 중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정책은 대부분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정책들로, 향후 갈등 관리 방안 마련 과정에서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더불어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전력요금 정상화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력 정책 전반의 체계성 개선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이 직접 연계되어 있는 갈등 이슈별 정책 수요 조사 결과, 국가 재생에너지 컨트롤 타워 구축과 정책 거버넌스 개선, 전력요금 정상화, 적기 송배전 인프라 구축, RPS 제도 개선 등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력 정책·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갈등 이슈별로 갈등의 유형과 원인에 따라 갈등 완화 방안은 다르게 나타날수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 체계 전반의 전환이 적절히 병행되지 않아 다양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지난 연구를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의 미비함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와 같이, 이번 설문을 통해 정책의 체계성 개선 및 제도적 개선 노력이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

- 국내 상황상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의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 및 중재를 위한 전문 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리 및 해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설문참여 기업들의 97.2%가 동의하고, 갈등 관리 노력 주체로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국회 순으로 선택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의 제도적 관리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갈등 관리 방법으로는 갈등 관리·중재 기구 설립을 통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특히 갈등 관리와 중재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해 93.8%가 동의하여 제도적 갈등 관리에의 선호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음.
 - 단계별로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 그간 추진해온 일부 정책들의 효과가 높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갈등 당사자들의 개별적 노력을 통해 갈등 해소를 유도하기보다는 제도적 갈등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그리고 제도적 갈등 관리 및 해결 수단 중 하나로 독일 사례와 같은 공공 갈등 관리 전문기구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문헌

이선우 외.(2021), '갈등연구방법론', 에피스테메(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정훈(2023.9.11),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국회미래연구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78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3.12.04.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와 시사점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정 훈	85
2023.12.11.	고용 없는 저성장·초고령 사회 대응 복지자원 조달 및 배분 방식 변화 검토: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재정	84
2023.12.04.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민보경	83
2023.11.06.	이머징 시티즌으로서 원폭피해자 증언과 미래의 평화구축(Peacebuilding)	김태경	82
2023.10.30.	디지털제품여권 도입에 관한 미래전망 및 대응방안	김은아	81
2023.10.16.	지속 가능 주거체제를 위한 주택 부문 정책 의제	이선화	80
2023.09.25.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치과정 :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혜윤	79
2023.09.11.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정 훈	78
2023.09.04.	“트리플 트랜지션(Triple Transition)” -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그리고 국제질서 전환	차정미	77
2023.08.28.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	이상직	76
2023.08.14.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 : 부산시민과 미래대화 사례 연구	박성원	75
2023.08.07.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	민보경	74
2023.07.31.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 - 한·미·일 비교 분석	정혜윤	73
2023.07.24.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 - 갈등적인 정책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작용 분석	박현석	72
2023.06.26.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	박성준	71
2023.06.05.	평화구축에 대한 서울지역 여성의 미래대화	김태경	70
2023.05.22.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쉰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	김현곤	69
2023.05.15.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차정미	68
2023.05.01.	만들어진 당원 : 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박상훈·정순영·김승미	67
2023.04.17.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 현황과 과제	이선화	66
2023.04.10.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와 미래전략	김은아	65
2023.03.20.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나는가: OECD 국가 비교	이상직	64
2023.03.06.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새로운 전환점 :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여영준	63
2023.02.27.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 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박상훈	62
2023.01.09.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61
2023.01.02.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박현석	60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2.12.12.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	성문주	59
2022.11.28.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민보경	58
2022.11.14.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예의 시사점: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	정 훈	57
2022.10.3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정책과 회복탄력적 혁신전략	여영준	56
2022.10.24.	일본의 정년정책: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정혜윤	55
2022.10.17.	대통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상훈	54
2022.09.19.	이머징 이슈 탐색 플랫폼의 이해와 활용	김유빈	53
2022.09.05.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희수·우해봉	52
2022.08.22.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이해관계자 분석	정 훈	51
2022.08.08.	한국인의 분배 인식: '능력주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	이상직	50
2022.07.25.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적 전략 구상	이선화	49
2022.07.11.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민보경	48
2022.06.13.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이채정	47
2022.05.30.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	46
2022.05.16.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	45
2022.05.02.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문지혜·황희정	44
2022.04.18.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다	김은아	43
2022.04.04.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	42
2022.03.2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	41
2022.03.07.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	40
2022.02.21.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	39
2022.02.07.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	38
2022.01.24.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	37
2022.01.10.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	36
2021.12.30.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 훈·여영준	35
2021.12.23.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완화와 적응	민보경	34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1.12.16.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	33
2021.12.09.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	32
2021.11.18.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	31
2021.11.04.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	30
2021.10.21.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	29
2021.10.07.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	28
2021.09.16.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조해인·정 훈	27
2021.09.03.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	26
2021.08.19.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	25
2021.08.05.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 준	24
2021.07.22.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	23
2021.07.08.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	22
2021.06.24.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	21
2021.06.1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	20
2021.05.27.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	19
2021.05.13.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	18
2021.04.29.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17
2021.04.15.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16
2021.04.01.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15
2021.03.18.	국내의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 훈	14
2021.03.04.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	13
2021.02.18.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12
2021.01.2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11
2021.01.07.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10
2020.12.24.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김유빈	9
2020.12.10.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8

발행일	제목	작성자	vol
2020.11.26.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7
2020.11.19.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정영훈	6
2020.11.12.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5
2020.10.15.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4
2020.09.17.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3
2020.09.03.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2
2020.08.20.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1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